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 경제안보 Review

## 경제안보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 경제안보 현안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경제안보 현안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억지력 강화 동향

##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미국-인도 무역 합의 발표
- 日-英 정상회담 개최
- 美 주도 '2026 핵심광물 장관회의' 개최 및 FORGE 출범 발표
- 美 백악관, 경제안보 기여 등 미국 국익 우선하는 무기 이전·판매 방침 발표
- 美 반도체 장비회사 Applied Materials 對中 불법 수출 관련 美 BIS 제재 조치
- 일본,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 I. 경제안보 분석

최용호 전문관

###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01

1. 美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관련 사법심사 동향 및 결과
2. 美 행정부의 잠재적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 및 후속 조치 동향
3. 관세 환급 쟁점
4. 분석 및 전망

## II. 경제안보 현안

김수연 전문관

###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0

1. 개요
2.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 III. 경제안보 현안

임산호 선임전문관

###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역지력 강화 동향

14

1. 배경
2. 대미 역지력 강화를 위한 최근 EU의 동향
3. 평가 및 시사점

## I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미국-인도 무역 합의 발표
- 日-英 정상회담 개최
- 美 주도 '2026 핵심광물 장관회의' 개최 및 FORGE 출범 발표
- 美 백악관, 경제안보 기여 등 미국 국익 우선하는 무기 이전·판매 방침 발표
- 美 반도체 장비회사 Applied Materials 對中 불법 수출 관련 美 BIS 제재 조치
- 일본,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

#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최용호 전문관

## 요약

### ■ 美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관련 사법심사 결과

- ▶ 美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 / 다만, 既 징수 관세의 환급 문제는 未 언급

⇒ ▲ 美 행정부의 대안적 관세 정책 방향 ▲ 관세 환급 ▲ 무역질서 변화 등 관련 쟁점 분석 필요

### ■ 美 행정부의 대안적 관세 정책 방향

- ▶ (상호관세 대체) 美 행정부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정책 기조 유지 전망

\* 301조, 122조, 232조, 338조 등 / 구체 내용 본문 참조

- 임시적 성격을 갖는 122조 관세를 부과하고 그동안 301조 절차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 / 다른 법률 수단도 추가로 활용 가능
- ▶ (제약) 다만, 301조 등 다른 법률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어 권한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새로운 사법적 쟁점도 부상할 수 있다는 점 주목 필요

### ■ 관세 환급 쟁점

- ▶ (쟁점) ▲ 美 연방대법원 구제조치 未 제시 ▲ 美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환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지 불확실

- 美 행정부 차원의 일괄적·자동적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환급 문제가 美 국제무역법원(CIT) 등 하급 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

- ▶ (대응)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절차 활용 ▲ 美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한 사법 구제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 무역 질서 영향

- ▶ (평가) ▲ 기존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 신규 수단을 활용한 미국의 상대국 압박 강화 가능성 ▲ 새로운 통상 갈등 발생 가능성 등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 등장

- 美 행정부가 ▲ 새로운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 새로운 사법적 제약에 직면하게 될지 등 향후 동향 추적하며 대비 필요

# 1. 美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관련 사법심사 동향 및 결과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 (사법심사 개요) 美 연방대법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위법 판결

- ▶ (소송 제기) 美 수입업체 및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하며 무효라는 소송 제기
    - (주요 쟁점) 美 헌법이 조세징수권을 의회에 부여한 상황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
- \* IEEPA 관세 관련 주요 사법 쟁점은 既 발표 『경제안보 Review』 25-10호 참조(최용호 2025)
- (대상 관세조치) IEEPA를 기반으로 한 관세조치가 이번 소송 대상(아래 표 참조) / 232조 품목관세 등 다른 美 통상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未해당

### (참고) IEEPA를 근거로 한 주요 관세 조치 예시

| 구분       | 행정명령     | 부과 이유            |
|----------|----------|------------------|
| 對캐나다 관세  | EO 14193 |                  |
| 對멕시코 관세  | EO 14194 | 마약 유입 및 불법 이민 대응 |
| 對중국 관세   | EO 14195 |                  |
| 상호(보편)관세 | EO 14257 | 무역적자로 인한 비상사태 대응 |

- ▶ (1·2심) 美 국제무역법원(1심, 2025.5.28.), 연방순회항소법원(2심, 2025.8.29.) 모두 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 위법 판결 → 美 행정부 상소(2025.9.3.)
- ▶ (3심) 美 연방대법원, 구두 심리 진행(2025.11.5.) /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6:3, 2026.2.20.)

※ (참고) 美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5명 이상 다수 의견으로 판결 결정

## ■ (판결내용)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 / 다만, 既 징수 관세의 환급 문제는 未 언급

- ▶ (美 헌법상 조세권) 美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美 의회의 고유 권한
- ▶ (美 의회의 위임 여부) 美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중대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권한 행사 불가(중대 질문 원칙, Major Questions Doctrine) /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모호한 법 문구만으로 대통령의 무제한적·일방적·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 인정 불가
- ▶ (IEEPA 법 문안 해석) IEEPA 법 문안 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규정 부재 / ‘수입 규제’는 관세 부과와 구분되는 권한

## 2. 美 행정부의 잠재적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 및 후속 조치 동향

### ■ 美 행정부의 잠재적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 검토

- ▶ IEEPA와 달리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여타 법적 근거 존재 / 다만, 이들 법 조항은 실체적·절차적 제약 요건을 정하고 있어 상호관세와 같이 포괄적·임의적 관세 부과는 제한

### 미국 관세 부과 근거법 정리

| 구분                    | 발동 요건                           | 절차 특징                  | 관세율·기간  | 비고  |
|-----------------------|---------------------------------|------------------------|---|---|
| 301조<br>(1974년 무역법)   |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                     | 조사, 협의, 의견 수렴 등 (UST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관세율 제한 없음</li> <li>• 4년마다 관세 유지 여부 재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를 통한 불공정 요건 충족 입증 필요</li> </ul>  |
| 232조<br>(1962년 무역확장법) | 특정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 조사 및 보고 등 (상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관세율 및 부과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를 통한 안보 위협 판단 필요</li> <li>• 품목 단위 적용</li> </ul>  |
| 122조<br>(1974년 무역법)   | 국제수지 위기, 달러 가치 하락 등             | 별도 조사 요건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상한</li> <li>• 150일 한도 (의회 동의 시 연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 성격</li> <li>• 트럼프 이전까지 전례 없음</li> </ul>  |
| 201조<br>(1974년 무역법)   | 수입 급증으로 미국 산업 중대한 피해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사, 공청회, 의견수렴 등 (IT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상한 (단계적 인하)</li> <li>• 4년 (연장 시 8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프가드 요건 충족 입증 필요</li> <li>• 품목 단위 적용</li> </ul>   |
| 338조<br>(1930년 관세법)   |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 행위                | 별도 조사 요건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상한</li> <li>• 기간 제한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공황 때 제정된 스무트-홀리법 규정</li> <li>• 차별 요건 충족 입증 필요</li> <li>•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li> </ul> |

출처: CRS(2025), 유지윤(2024) 등 참조하여 저자 작성

### ■ (행정부 대응) 美 행정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10% 글로벌 관세 부과 발표 / 아울러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체 관세 부과 방침 언급

- ▶ 트럼프 대통령, 122조에 근거하여 20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美 동부 시간 2026.7.24. 0시 1분 종료) 전 세계 대상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발표(2026.2.20.)
  - (예외) 232조 품목관세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특정 품목(광물·의약품·농산물·에너지·USMCA 총족 품목 등)은 글로벌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포고문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2026.2.21.)

- ▶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301조 등 다양한 대체 관세 부과 조치 강구
  - 미국 무역대표부(USTR) Greer 대표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산업 과잉생산 능력 ▲강제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기술 및 디지털 ▲해양 오염 ▲수산물 ▲쌀 ▲기타 제품 등 주요 우려 분야를 조사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2026.2.20.)
  -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대상이 될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2026.2.22.)
- ▶ 재무부 장관, USTR 대표 등 주요 당국자는 美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지속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

### 3. 관세 환급 쟁점

#### ■ (쟁점) IEEPA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 / 그러나 현재 관세 환급 절차·범위 등 불분명

- ▶ 美 연방대법원은 IEEPA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관세 환급 문제 등 구제조치 관련 판단은 내리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환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투명
  - 환급 문제가 美 국제무역법원(CIT) 등 하급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
- ▶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美 행정부 차원의 즉각적·자동적·일괄적 관세 환급 개시 여부도 불확실
  -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 관세 환급 관련 향후 혼란이 예상되는바, 여기서는 ▲美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절차 ▲조세 환급 관련 기존 사례(1999년 美 항만유지세 환급) ▲관세 환급 관련 최근 美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의 입장(AGS 사건) 중심으로 분석

#### ■ (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절차) 관세 환급 절차는 ‘정산’\*(liquidation) 전후로 다르게 적용 (한아름·이유진 2026)

- \* 수입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관세를 美 CBP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 일반적으로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 후에 이루어짐.
- ▶ (정산 前) 수입자<sup>1</sup>는 ‘사후정정신고(post summary correction, PSC)’<sup>1</sup>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정하고, 관세액은 정산 시 환급 / 비교적 간단한 절차
  - \* 관세 환급 청구 권한은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 수입 통관 신고서 상의 ‘수입 신고자(Importer of Record, IOR)’에 있음.
- ▶ (정산 後) 수입자는 법적 성격이 강한 ‘이의제기(protest)’를 통해 환급을 요구해야 하며, 정산 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필요

- 이의제기와 함께 ‘가속처분 요청’을 신청하게 되면 CBP는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
- 상기 절차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CIT에 제소하여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 ■ (기존 환급 사례) 1999년 美 항만유지세 환급 당시 사법부 주도로 환급 명령을 발부하여 환급 진행

- ▶ (사건 개요) 美 행정부의 항만유지세 부과에 대해 美 연방대법원은 위헌으로 판결하고 환급 절차는 하급심인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처리하도록 환송 결정
- ▶ (환급 절차) 대법원 판결 → CIT, 환급 명령 발부 → CBP, 연방관보에 환급지침 발표 → 환급 대상 수입업자, CBP에 환급 신청 → CBP, 환급 진행
  - 연방대법원, 구체 환급절차 및 금액 산정 권한을 CIT에 위임
  - CIT, CBP에 제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既定수한 항만유지세를 환급하도록 명령
  - CBP는 180일 이내 관세 환급 신청 기한 부여 / 소송참여자는 자동 환급 대상이 되었으며, 비참여자도 동일 법적 근거로 환급 청구 가능
  - CBP, 수입자 계좌로 약 3년에 걸쳐 환급금 송금 / 상정된 이자도 지급

### ■ (최근 美 CIT의 입장) CIT는 관세 ‘정산’의 중지를 구하는 가치분 신청(AGS 사건)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환급의 법적 기반에 대해서 언급(BKL 2026; Kim&Chang 2025; Shin&Kim 2026)

- ▶ (사건 개요) 다수 수입업자, 관세 정산이 이루어지면 관세 환급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정산의 중지를 구하는 가치분 신청
  - CIT는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환급의 법적 기반에 대해서 언급
- ▶ CIT는 IEEPA 관세 위법 판결이 날 경우,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재정산을 통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美 행정부가 분명히 밝혔음을 강조
  - 또한 만약 美 행정부가 향후 입장을 번복하여 이미 청산이 되었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이는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 CIT는 미국법에서 정한 관할권에 따라 IEEPA 관세 관련 분쟁에서 사후적으로 재정산 및 환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 확인

## 4. 분석 및 전망

### ■ (총평) 이번 판결을 통해 美 사법부는 행정부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 이번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법적 기반 상실

- ▶ 다만,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美 행정부의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IEEPA를 활용하여 대통령 재량으로 관세 사유·대상·수준·협상 방식 등을 유동적으로 정했던 상호관세와 같은 정책 추진은 어려워 기존에 비해 제약
- 232조 품목관세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지속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美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한 다른 법을 인용하여 관세를 지속 부과한다는 입장 / 이미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등 상대국을 압박하는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명확화
- 다만, 국내정치적으로 트럼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고 있고, 美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수세 직면(신재우 2026; Lee 2026) / 향후 관세 부과 대상 및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 IEEPA 대통령 권한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일단락되었으나, 美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
  - ▲ 다른 법률 수단을 활용한 美 행정부의 대안적 관세정책과 이를 둘러싼 사법 쟁점, ▲ 이미 美 행정부와 관세합의를 이룩한 국가들도 있는 상황에서 각 국별 관세 재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경쟁력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 관세 환급과 관련된 사법 쟁점 ▲ 美 행정부의 변화된 관세 정책에 대한 타국의 대응 변화 여부 및 글로벌 무역질서에 미칠 영향 등 새로운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부상 전망

## ■ (관세 복원 방향) 美 행정부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정책 기조 유지 전망

- ▶ (복원 방식) 현재로서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122조 관세를 부과하여 시간을 벌고, 그동안 조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301조 절차를 개시하여 궁극적으로 301조 관세를 활용하는 방안 추진 중
  -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적용 품목의 확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되나 338조를 근거로 하는 관세 등 여타 수단도 활용 가능
  -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을 활용하여 수입허가제(import licensing scheme)를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바(Palmer 2026), 관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활용한 통상정책 집행 가능성도 지속 관찰 필요
- ▶ (제약) 다만, 다른 美 통상법률은 관세 부과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권한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법률 요건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법적 쟁점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점 주목 필요
  - (122조) 150일간 한시적으로 15%까지만 관세 부과 가능 / 일각에서는 ▲ 이전까지 122조가 사용된 전례가 없다는 점 ▲ 국제수지 위기 등이 존재하는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 ▲ 법 취지를 넘어선 목적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법정 공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심재현 2026)

- (301조) 대상 국가의 불공정 행위 존재 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USTR 조사를 통해 보여야 하며, 상대국 협의,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여 신속한 관세 부과 어려움 / 다만, 많은 경우 301조 관세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경향
- (232조) 국가안보 위협 판단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넓은 재량권 인정 / 다만, 232조도 상무부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국가 전체가 아니라 품목·산업 단위 규제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모든 국가 또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는 부적합(이병철 2026)
- (338조) 까다로운 절차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 상대국의 차별적 행위가 존재하면 부과 가능 / 그러나 1930년 대공황 시기 제정된 법 취지상 ‘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Wolff 2026)

### ■ (관세 정산 문제) 美 행정부 차원의 일괄적·자동적 환급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 환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지 불확실하여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

- ▶ 美 행정부는 관세 환급을 약속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환급할지는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환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수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를 지연할 수 있다는 비판적 전망도 제시(홍경표 2026)
- ▶ 美 연방대법원이 환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사법 절차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
  - 다만, 관세 환급 관련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美 국제무역법원(CIT)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환급 문제가 CIT 등 하급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
- ▶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절차 활용(정산 전 사후정정신고 / 정산 후 이의제기) ▲美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BKL 2026; Kim&Chang 2025; Shin&Kim 2026)
  - 개별로 ▲피해와 납부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불가피 / 소급 범위와 적용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 또한 원칙적으로 환급은 관세 납부자인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자체적인 현지 법인 등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수입업자와의 협의 등도 진행 필요

### ■ (무역 질서) 美 행정부가 새로운 법률로 대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기존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새로운 통상 갈등 발생 가능성 등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 등장

- ▶ 이번 판결의 요체는 美 행정부가 관세 부과 권한을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위임받지 않은 경우에 임의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다른 대체 수단 보유

- 아울러, 무역 합의가 여타 안보 이슈와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당장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김기범 2026)
- ▶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관세를 도입하여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통상 압박을 시도하는 경우, 통상 갈등 재점화 여지도 존재하는 등 불확실성이 큼
  -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국내 청중을 위한 가시적 성과 마련이 중요해지는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준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대비 필요
- ▶ 美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새로운 사법적 제약에 직면하게 될지 여부 등 향후 동향 추적하며 대비 필요

## 참고문헌

- 김기범. (2026.2.22.).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주요국들, 대체로 신중…재협상 가능성 제한적”. 『경향신문』.
- Kim&Chang. (2025.12.23.). “IEEPA 관세 부과 사건 동향 및 환급 관련 쟁점”. 『뉴스레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 BKL. (2026.1.8.). “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 전략”. 『Legal Update』. 법무법인 태평양.
- Shin&Kim. (2026.2.23.).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전망”. 『뉴스레터』. 법무법인 세종.
- 신재우. (2026.2.21.). “[美관세 위법판결] 미국인 64% ”관세지지 안해“… 대법 판결 직전 여론도 싸늘”. 『연합뉴스』.
- 심재현. (2026.2.23.). “트럼프가 믿는 ‘무역법 122조’… ‘목적남용’ 법적 논란 불가피”. 『머니투데이』.
- 유지윤. (2025.6.28.).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병철. (2026.1.20.). “관세 패소해도 즉시 대체“…美 ‘슈퍼301조’ 등 플랜B 가동[트럼프 관세 드라이브]”. 『파이낸셜뉴스』.
- 최용호. (2025.5.23.).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경제안보 Review』 25-10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한아름·이유진. (2026.1.26.). “美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Trade Brief』 4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홍경표. (2026.2.22.).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따른 기업 환급은 어떻게”. 『연합인포맥스』.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5.4.23.).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Authority to Impose Import Tariffs. *CRS Report*.
- Lee, Chantelle. (2026.2.21.). ‘A Win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Some Republicans Celebrate Supreme Court Ruling Against Trump’s Tariffs. *Time*.
- Palmer, Doug. (2026.1.26.). How Trump Could Try to Use Licenses to Regulate Imports. *PoliticoPro*.
- Shalal, Andrea. (2026.2.22.). Tariff Ruling Limits Trump’s Leverage but Won’t End Uncertainty for Trade Partners. *Reuters*.
- Wolff Alan Wm. (2026.2.). Can Trump Keep His Tariffs if the Supreme Court Invalidates Them?. *Policy Brief*. 26-5.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저자 소개

최용호 | yhochoi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경제, 기술패권경쟁,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정책의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 정책: 틱톡 규제의 사례”(글로벌정치연구, 2025), “미일 기술패권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이승주 편, 2020, 『미중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경제안보리뷰, 23-7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경제안보리뷰, 24-8호),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경제안보리뷰, 24-19호) 등이 있다.

#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수연 전문관

## 1. 개요

### ■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2026)' 개최(뉴델리, 2.16~20.)

- ▶ (개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및 외교부 주도로 주최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최초의 국제 AI 정상급 정상회의인 'AI 영향 정상회의' 개최
  - 동 회의는 2023년 영국 'AI Safety Summit', 2024년 한국 'AI Seoul Summit', 2024년 프랑스 'AI Action Summit'에 이어 네 번째 AI 정상회의
- ▶ (참석국·참석자)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등 118개국 정부 대표단 참석 20개국 정상급 인사 및 장관급 인사 참여
  - ※ 프랑스·브라질 대통령 등 다수 국가 정상급 인사 참석, 우리나라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기업 및 AI 연구·산업계 등 참여
    - ※ 인도 정부는 100명 이상의 글로벌 AI 리더, CEO 및 CXO와 함께 500명 이상의 세계 최고 AI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총 참가자는 5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발표
- ▶ (부대 행사) 30개국에서 550개의 사전 행사 개최 및 정상회의 기간 동안 500개 이상의 부대 행사 조직

## 2.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 ■ (공동성명 채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견고한 AI 발전을 촉구하는 'Delhi Declaration 2026' 발표

-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89개국 및 EU, IFAD 등 2개 국제기구 서명
- ▶ 모두의 복지, 모두의 행복(Welfare for all, Happiness of all) 원칙에 영감을 받아, AI의 잠재력은 인류 전체가 혜택을 공유할 때 가장 잘 실현된다고 강조
  - AI 영향 정상회의의 7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강화
    - \* ▲AI 자원 민주화 ▲경제성장 및 사회적 이익 ▲안전·신뢰가능한 AI ▲과학 ▲사회적 역량 접근 ▲인적자본 ▲회복력·혁신·효율성

- ▶ 동 공동성명은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이며, 후속 협의 및 국제협력, 다자간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 강화 노력 지속

### < Delhi Declaration 2026 주요 내용 >

- ▶ **(AI 자원 민주화)** 견고한 디지털 인프라 및 경제적인 연결성을 통해 AI 자원의 접근성 및 경제성 향상 필요
  - 국가 법률을 존중하면서 AI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을 지원하며 탄력적인 AI 생태계 강화
- ▶ **(경제성장·사회적 이익)** AI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및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성, 반복 가능성 및 적응성 향상에 기여
  - 성공적 AI 활용 사례의 지역 간 도입 및 확산을 촉진·지원하는 실질적 플랫폼으로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Global AI Impact Commons’ 출범
- ▶ **(안전·신뢰가능한 AI)** AI 시스템 내 보안, 산업계 주도 자발적 조치, 기술적 해결책, AI 전 수명주기에 걸친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 필요
  - 기술 자원 도구, 벤치마크, 모범사례 등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인 ‘Trusted AI Commons’의 자발적·비구속적 발전사항 발표
- ▶ **(과학)** AI 연구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 장벽 해결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해 R&D 분야 AI 활용 촉진
  - 과학 공동체를 연결하고 지역 간 AI 연구 역량을 결집한 협력적·자발적 플랫폼 ‘International Network of AI for Science Institutions’ 출범
- ▶ **(사회적 역량 강화)** AI는 개인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및 사회 모든 계층의 역량을 제고할 잠재력을 가진바, AI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필요
  -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AI 학습 경험, 지식 및 모범사례(scalable practices) 교류를 촉진하는 자발적·협력적 플랫폼 발전 주목
- ▶ **(인적자본)** AI 인적자원 개발,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공공부문 교육훈련, AI 리터러시 확대, 직업교육 및 훈련 생태계 고도화 등 필요
  - AI 역량 강화 관련 국제 협력 장려, 자발적 가이드 원칙 및 실행 지침\* 등 공개
    - \* ‘Voluntary Guiding Principles for Reskilling’ 및 ‘Playbook on AI Workforce Development’
- ▶ **(회복력·혁신·효율성)** AI가 에너지, 인프라 및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데, 에너지 효율적인 AI 개발 중요성 강조
  - 회복력있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가이드 원칙 및 참고자료\* 등 공개
    - \* ‘Voluntary Guiding Principles on Resilient, Innovative, and Efficient Artificial Intelligence’ 및 ‘Playbook on Advancing Resilient AI Infrastructure’

## ■ (민간 투자 발표) AI 인프라 및 첨단기술 분야 대규모 투자 약정 발표

- ▶ 금번 정상회의 계기 인도 AI 인프라 관련 투자 약정 2,500억 달러 초과 / 첨단기술 벤처 투자 약정 약 200억 달러(인도 전자정보기술부, 2026.2.21.)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인도 AI 인프라 생태계에 대한 세계적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인도 독자 AI 모델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지지 및 국내 모델 우수성을 강조
- ▶ 인도 Reliance Industries, 아나디 그룹 및 美 Microsoft, 오픈AI 등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및 협력 계획을 발표

### < 주요 기업별 투자·협력 발표 내용 >

| 기업                  | 주요 내용  | 발표 일자      |
|---------------------|--|------------|
| Reliance Industries | 데이터센터 건설, AI 인프라 등 약 1,1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2026.2.19. |
| 아나디 그룹              |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1,0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2026.2.19. |
| Microsoft           | 2030년까지 글로벌사우스 AI 투자 확대 계획 발표(저소득 국가 대상 AI 접근성 확대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약 5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 2026.2.18. |
| 오픈AI                | 인도 Tata Consultancy Services 파트너십 발표 및 100MW 규모 AI 인프라 구축 협력 발표                    | 2026.2.19. |

출처: Reuters, Times of India 등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3. 평가 및 시사점

### ■ 동 정상회의는 최초로 글로벌 사우스인 인도에서 개최되어 안전(영국), 혁신·포용(한국), 행동(프랑스)에 이어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의제로 설정

- ▶ 특히 AI 혜택을 모든 국가와 사회 계층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AI의 실질적인 구현과 성과 창출에 중점
  - 인도 정부는 동 회의 기간 중 GPU 20,000대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바, 이는 기존의 논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인프라 확대 등 실행 과제를 포함
- ▶ 동 회의는 AI의 활용 측면, 즉 현장 적용, 혜택 및 신흥 경제국의 글로벌 AI 생태계 통합 등에 대해서도 논의 확대
  - 엑스포 형태의 AI 적용 사례 전시, 수백여 업체 참여 등을 통해 규범 논의 중심에서 사용·적용 중심 회의로 구성

### ■ 정상회의 기간 중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발표가 이어졌으며,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를 글로벌 AI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제시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6.2.13.). “배경훈 부총리,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에서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AI 리더십) 굳힌다”.
- 관계부처 합동. (2026.2.19.). “배경훈 부총리,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외교 행보 본격화”.
- 박진형. (2026.2.21.). “안전·신뢰·견고 AI 촉구…인도 AI정상회의의 공동선언”. 『연합뉴스』 .
- 인도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26.2.21.). AI Impact Summit Declaration, New Delhi (February 18-19, 2026).
- 인도 Ministry of Electronics & IT. (2026.2.20.). India AI Impact Summit 2026 Concludes at Bharat Mandapam with Strong Global Endorsement of India’s Responsible AI Vision.
- Government of India. (2026.2.17.). 20,000 additional GPUs power India’s next phase of AI leadership.
- Navroop Singh. (2026.2.24.). India’s Sovereign AI Push amid US China Tech Race. Niti Shastra.
- Reuters. (2026.2.19.). Tech majors commit billions of dollars to India at AI summit.
- The Times of India. (2026.2.18.). Guinness World Record, Microsoft’s \$50 billion investment, Google’s America-India Connect and other major announcements on Day 3 of India AI Impact Summit 2026
- The Times of India. (2026.2.19.). OpenAI partners with TCS to build 100MW AI infrastructure in India
- Business Standard. (2026.2.10.). What makes India AI Impact Summit different from earlier global AI meetings.

### 저자 소개

김수연 | syekim23@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AI 거버넌스, 핵심·신흥기술 및 규범, 기술혁신·보호, 수출통제, 국제표준이다. 주요 연구로 「주요국 AI 정책 재편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리뷰 25-16호(2025) 「美 우주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리뷰 24-22호(2024), 「4차산업에서 재료와 표준」(2023), 「수출통제총람」(2021, 2018)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Degradation behaviours of Fe-doped  $\text{La}_{0.8}\text{Sr}_{0.2}\text{CoO}_{3-\delta}$  by thermal stress,” *Advances in Applied Ceramics* (2018) 등이 있다.

#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억지력 강화 동향

임산호 선임전문관

## 1. 배경

■ **지난 1월 미국-EU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킨 그린란드 사태는 EU가 규범과 동맹에 기반한 기존의 안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재확인시켜주었으며, 유럽의 실질적 주권 수호 역량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작용**

- ▶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유럽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2026.1.20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트럼프의 추가 관세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
- ▶ 2026.1.21. 채택된 유럽의회 결의안에서는 덴마크를 비롯한 EU 회원국을 향한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강압의 한 형태로 규탄하고, 이러한 강압적인 시도에 EU가 공동으로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

■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 이후 관세 위협을 철회(1.22)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으나, 유럽은 기존 형태의 대서양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전략적 자율성을 위협하는 대상임을 수용하는 단계로 변화 중**

- ▶ 이러한 EU의 판단은 2026.2.13-2.15일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발언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 독일 메르츠 총리는 연설에서 "다시 한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라며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고 이미 잃었을 수도 있다"고 발언

\* 뮌헨안보회의는 '무기를 동반한 다보스 포럼(Davos with Guns)'라고 불릴만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주요국의 구상을 드러내는 자리로, 특히 미국-유럽간 인식 차와 대서양 동맹의 기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플랫폼

- 올해 발표된 뮌헨안보회의 보고서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가 80년 만에 파괴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기존 규범과 제도를 파괴하는 주요 행위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직언
-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유럽이 공동의 운명으로 연결된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유럽 달래기에 나서는 동시에 유럽이 강한 역량과 자립성을 갖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 **EU는 역내 경쟁력 강화와 방위 역량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대서양 관계 재조정과 이에 연계된 대중 관계 재정립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대외관계 및 정책설계에서 관련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

- ▶ 이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분석은 우리 대외전략 및 경제안보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

## 2. 대미 억지력 강화를 위한 최근 EU의 동향

■ **EU는 2025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대체로 수세적 태도를 유지해 왔으나, 1월 그린란드 사태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위협을 완화시키는 억지 효과가 일정 부분 발휘된 것으로 평가**

- ▶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계획에 반대하며 군을 파견한 유럽 8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 대해 보복관세를 예고(2026.1.17.)한 데 대해, 해당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 대응하겠다’고 발표(2026.1.18.)
  - 이에 EU에서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표1 참조)와 지금까지 가동된 바 없는 반강압조치(ACI)의 가동(표2 참조)이 검토됨
  -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마르크 뤼터 NATO 총장과 회담 이후 그린란드에 관한 프레임워크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유럽 8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철회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다소 완화(2026.1.21.)
- ▶ EU의 적극적 대응 방침 발표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 달러 약세(2025년 4월 이후 최대 하락폭), S&P 500 등 주요 주가지수의 2% 이상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확대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 존재
  - 그린란드 관련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유럽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1.20일경), 대서양 관계의 긴장 고조와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자본시장에 반영되면서 ‘Sell America’ 포지셔닝이 강화
    - \*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작전(1.3.) 국면에서 S&P500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리 그린란드 위협은 불확실성 확대와 동맹 간 균열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나아가 당시 유럽 기관들이 보유한 약 10조 달러 규모 미국 자산을 EU 반강압조치(ACI)와 연계한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Bloomberg)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 변동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 ▶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강압 조치(ACI)와 달리 추가 입법 없이 곧바로 사용될 수 있는 사전 준비된 법적 수단으로 설계

## <표1> EU 930억 유로 규모 보복관세 패키지 관련 내용 : 현황 및 법적 근거

### (보복관세 준비 및 유예 현황)

- EU는 2025.4월에 이미 930억 유로 규모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목록을 사전 채택했으며, 7월에 회원국들이 승인(헝가리 반대)한 상태로 즉시 발동 가능한 '보복관세 패키지'를 준비
- 2025.7월 미국-EU 무역합의에 따라 EU는 보복관세 패키지의 이행을 6개월 유예(2025.8~2026.2) 하였으며, 뒤이어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철회(2026.1.23)에 따라 6개월 추가 유예(2026.2.7.~2026.8) 결정

### (보복관세 구성)

- EU의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목록은 과거 WTO 분쟁에서 실제 사용된 사례로 과거 보잉-에어버스 분쟁(버번 위스키, 할리데이비슨)과 트럼프 1기 철강 보복(청바지, 농산물)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던 제품군이 포함됨
- 930억 보복관세 목록에는 ▲자동차, 항공기 및 운송장비(포드, GM, 보잉/15~20%) ▲산업재·기계류(30~35%) ▲농식품(대두, 가금류, 과일류/20~25%) ▲소비재·상징 품목(버번 위스키 등/10~15%) 등이 포함

### (보복관세 법적 근거)

- 보복관세 패키지는 리스본조약 207조에 따라 EU 공동 통상정책(Exclusive competence) 범위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회원국들이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QMV)로 채택한 집행규정(Implementation Regulation (EU) 2025/1564) 형태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구속 규범
- 현재 미국-EU의 무역합의로 유예되어 있을 뿐, 위급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 또한 해당 보복조치는 WTO 규범(특히 GATT 상의 보복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관세가 WTO 불법조치로 간주될 경우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22조에 따라 피해규모와 동등한 수준의 상응조치를 허용하는 규칙을 준수해 설계
- 이미 WTO는 2022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철강 25%, 알루미늄 10%)에 대해 GATT 1조(MFN), 2조(관세 양허표 초과), 11조(수입제한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현재 기능이 정지된 WTO 상소기구에 항소하는 방식으로 판정 채택을 저지하며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으나, EU는 보복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중

- ▶ 반강압조치(ACI)는 2023.12월 발효되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규정(Regulation)으로, 비EU 국가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EU가 투자 제한, 조달 금지, 상품 및 서비스 관세 부과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최종적 수단으로 평가

- 다만 ACI 발동을 위해서는 가중다수결(QMV) 방식으로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 EU 인구의 6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절차상 다단계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가동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 또한 ACI 발동시 미국의 보복이 ▲유럽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술·금융 서비스 접근 제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정보 지원 축소 ▲NATO 관련 조치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경제·안보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으로 평가

### <표2> EU의 반강압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관련 내용 : 현황 및 절차

#### (법적 지위)

- 공식명칭 : 「Regulation (EU) 2023/2675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 입법 절차를 걸쳐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2023.12.27.일 발효되었으며, 가동 상태의 법적 도구로 평가되고 있으나 발효 이후 2026년 현재까지 ACI에 근거한 구체적 대응조치는 아직 발동된 적이 없는 상황

#### (목적 및 절차)

- EU 집행위는 ACI의 목적은 강압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식 인정 ② 해당 국가와의 협의 절차 ③ 협회가 실패하고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조치 채택이 필요할 때, 비로소 발동 조건이 충족
- 먼저 경제적 강압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 제3국이 EU 또는 특정 회원국의 정당한 주권 결정이나 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저지·지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
  -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투자·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실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해당 조치가 EU나 회원국에 압력을 형성할 정도의 강도·범위·기간·규모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필요
- 발동 절차상의 조건에 따라,
  - 1단계(경제적강압 조사) : 회원국의 문제 제기 또는 집행위 직권으로 개별 사안을 조사(examination) 단계에 회부(최대 4개월 동안 조사)
  - 2단계(경제적강압 인정) : 집행위가 조사를 통해 제3국의 해당 조치가 강압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리면, 이사회에 경제적 강압 존재를 인정하는 집행결정(implementing act) 제안을 제안

- 3단계(협의절차) :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QMV) 형태로 경제적강압의 존재를 공식 결정하면, 집행위가 먼저 제3국에 강압 중단을 요청하고 협의·협상을 진행
- 4단계(구체 대응조치 채택) : 이러한 협의절차에도 강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구체적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s) 제안 및 채택하며, 회원국은 심사절차에서 가중다수결(QMV) 형태로 채택 여부를 결정

### (평가)

- 조사 및 협상 과정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두 차례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해 회원국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ACI 발동의 장애물로 문제 제기 중
- 해당 규정의 Annex에서는 집행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조치 카테고리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입 제품에 신규 관세 부과 ▲서비스, 투자 제한 ▲공공조달 참여 제한 ▲금융 서비스·이동 제한, ▲인증, 지재권 등 규제상 혜택 제한 등이 포함

## ■ 유럽의회는 그린란드 갈등 이후 미국-EU 무역합의 수정안에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등 전제 조건을 마련 중이었으며,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불확실성을 이유로 승인 절차 재중단을 발표(2.23)

- ▶ 2025.7월 체결된 EU-미국 무역합의 승인 절차를 추진 중이던 유럽의회는 그린란드 사태 계기 일시 중단했던 승인 절차를 재개(1.21.)하면서 무역협정 수정안(common position) 내에 미국의 일방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합의(2.10.)
  -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 재발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수정안 내에 미국이 유럽 영토 보전을 위협할 경우 협정의 정지조항(suspension clause)을 추가하는 것에 합의
  - 또한, 트럼프 임기 중인 2028.3월에 무역협정이 자동만료되고 재협상을 의무화하게 하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 포함에도 합의
  - 철강 관세 조항도 포함되었는데 미국이 EU 철강 제품 관세를 6개월 내에 50%→15%로 인하하지 않으면, 집행위원회에 협정 재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합의
  - 위의 수정안에는 기존에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은 부재 (2.19일 기준)
    - ※ 미국의 공식적인 대응 부재 배경에는 현재 유럽의회는 수정안이 EU 내부 입법 절차에 머물러 있고 미국 측은 IEPPA의 판결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식 대응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동 수정안은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인식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철강 관세와 정지조항 등 논쟁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의 마찰 가능성과 함께 EU 회원국 간 입장 차이도 표출될 것으로 전망

- ▶ 한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2.24일로 예정되었던 무역합의 표결을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연기하기로 결정(2.23)

## ■ 아울러 유럽은 정치·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동맹 다변화를 추진하며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재조정을 진행 중

- ▶ 유럽 정상들은 올해 잇달아 중국 공식 방문을 추진하며 대중국 안보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강화하는 한편, 경제 협력 채널은 지속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을 병행 중
  - 2025.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2026년 1~2월 아일랜드·핀란드 총리와 영국 스타머 총리, 최근 독일 메르츠 총리(2.24~2.26)까지 유럽 주요 정상들이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잇달아 모색 중
  - 이는 대중국 시장 접근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유럽 간 관계 경색 속 미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
- ▶ 최근 EU에서는 경제·안보 관련 주요 결정에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EU 경제대국 6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이 E6라는 비공식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의사결정 신속화를 추진
  - 협의체는 기존 EU의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움직이는 방식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 인식에 따라 결성
  - 6개국이 EU GDP의 70%를 차지하며, 이들 국가는 EU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 역할을 할 것 (2026.3.9~3.10일 첫 정식회의 예정)
  - 관련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EU 정상들에 보낸 서한(2026.2.18.)에서 "유럽의 경쟁력, 행동 역량이 약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강화된 협력 조약 규정 활용을 주저해선 안된다\*"고 언급함에 따라, 집행위가 실질적으로 E6를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
    - \* 이는 유럽연합 조약(TEU) 제20조(강화된 협력, Enhanced Cooperation)에 대한 직접 인용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EU 전체 합의가 불가능할 때 최소 9개 회원국이 함께 집행위에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
- ▶ 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미국 의존도와 대체 불가능성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최근 독일·프랑스 등 E6 국가 재무장관들이 관련 부문에서 협력을 개시(2026.1월말 화상회의, 2월 중 회동)
  - 핵심논의 주제로 자본시장통합(Savings and Investment Union) 가속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금융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 향후 회의에서는 유로화 국제적 역할 확대, 국방투자 조정, 핵심원자재 및 공급망 부문의 논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Visa·PayPal 등 미국 중심 결제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럽의 금융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디지털유로와 같은 자체적인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
    - ※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결제이니셔티브(EPI)는 디지털 지급 'Wero'를 중심으로 범유럽 계좌기반 결제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최근 EPI와 EuroPA Alliance가 상호연동을 위한 MOU를 체결함에 따라 유럽 내 국가별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실질적 진전(2026.2.2.)

- ▶ 한편,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NATO 역할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내에서는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럽 핵우산’ 논의가 빠르게 확산중
  - ※ 유럽의 자체 억지력 구축은 미국-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 2010년 체결) 협정이 2026.2.5일 공식 종료되며 양국의 핵전력 법적 제약이 소멸됨에 따라 글로벌 핵군비 경쟁 재개가 예상되면서 더욱 힘을 얻는 중
  - 독일 메르츠 총리는 최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럽 차원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으며(2026.1.29) 영국과 프랑스는 2025.7월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 내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핵전력 상호운용성 협력에 합의한 바 있음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재조직하고, 핵 억지력의 역할을 재정의 해야 한다’며 프랑스 핵전력의 유럽 차원 활용 가능성을 시사(뮌헨안보회의, 2026.2.13.)
  -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국가들은 핵무장 또는 핵 억지력의 EU 차원 확대에 대해 비핵화 원칙과 국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회원국 간 상당한 입장 차이가 불가피
-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EU는 인도·메르코수르 등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대형 FTA를 가속화하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다변화 확대를 추진 중
  - 올해 1월에만 EU-메르코수르 FTA(2026.1.9., EU 이사회 승인, 의회 비준 대기), EU-인도 FTA(2026.1.27. 타결)가 급진전됐다는 평가
  - 그러나 약 1.6조 유로로 EU 전체 교역의 약 20%에 달하는 EU-미국 교역 규모(2024년 기준)는 메르코수르·인도와와의 FTA가 체결되더라도 향후 10년 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

### 3. 평가 및 시사점

-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U 내부에서는 대서양 협력이 전후 최저 수준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며,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미 의존도 축소를 추진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
  - 그린란드 합병 압박과 특정 회원국 대상 관세 위협이 유럽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인식되며, EU 내에서 대미 대응 기조 전환이 불가피한 임계점에 도달
- ▶ 미국과의 구조적 상호의존으로 단기간 내 결별이 어려운 가운데, 유럽은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체 옵션을 확보하는 동시에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는 공급망 협력을 병행하는 ‘동맹 유지형 디리스킹’ 전략을 전개
  - 최근 EU는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미국에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을 제안하며 3개월 내 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 중(2026.2.2.)

- 이는 미국의 IRA 보조금이 핵심광물의 미국 또는 FTA·CMA(핵심광물협정) 국가 내 추출·가공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EU가 CMA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 시장 접근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
- 동시에 북미 공급망과의 연계 및 채굴·정제 협력은 핵심광물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
- ▶ EU는 전면적 대치 국면은 회피하되, 핵심 안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반강압조치(ACI)와 보복관세 등 경제적 대응수단을 가동하는 선택적 대응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간 정비해 온 경제안보 정책 수단들이 대미 대응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의 회동 이후 그린란드 관련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2026.1.21.)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나, 갈등의 촉발 요인은 잔존
  - 향후 무역협상 승인과 이행 과정, 디지털 통상 규범을 둘러싼 이견 등은 2026년에도 양측 관계의 긴장을 재차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변수로 평가
  - EU는 ACI와 보복관세에 국한되지 않고 FDI 심사제도, 외국보조금 규정,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인공지능법(AI Act) 등 여러 경제안보 관련 입법을 선제적으로 축적해 온 제도적 기반을 보유
  - EU의 역지력은 단기적으로 즉시 발동 가능한 보복관세 패키지와 같은 신속 대응 수단, 중기적으로는 ACI와 같은 포괄적 대응 메커니즘, 전반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법(DSA)·디지털시장법(DMA)·인공지능법(AI Act)·외국보조금규정·FDI 심사제도 등 규범 기반의 규제로 구성된 구조적 틀을 형성
  - 이러한 수단들은 설계 목적과 별개로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조건 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구조적 레버리지로 작동할 가능성
- ▶ 금번 사례는 EU가 구축해 온 경제안보 수단이 실제 발동 여부와 별개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 부분 억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시장 영향력을 수반한 경제안보 수단의 실질적 효용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 가능
  - 아울러 관련 조치들을 사전에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해 실제 발동 가능성을 확보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가동 가능한 실효적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 참고문헌

- Mark, J., & Lipsky, J. (2026.02.10). China’s warning on US Treasuries—and why its timing matters. Atlantic Council.
- García Berceo, I. (2026.01.20). The end of the Turnberry truce: How the EU should react to US coercion over Greenland. Bruegel.
- García Berceo, I. (2026.02.02). Defining the new strategic direction for European Union trade policy. Bruegel.
- Luck, P. (2026.01.28). Why Economic Coercion Over Greenland Would Backfir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 Gehrke, T. (2025.03). Brussels hold’em: European cards against Trumpian coerci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
- Kobzova, J., Leonard, M., O’Brien, J., Puglierin, J., Shapiro, J., Tcherneva, V., & Westgaard, K. (2026.01.16). Arctic hold’em: Ten European cards in Greenland.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
- Bloomberg. (2026.01.19). Why ‘Anti-Coercion’ Tool Is the EU’s Trade Weapon of Last Resort.
- Bloomberg. (2026.02.11). EU Lawmakers Advance US Trade Deal With Fresh Conditions.
- Euractiv. (2026.02.11). The rise of ad hoc Europe.
- Euronews. (2026.02.11). European Parliament’s political groups agree EU-US trade deal

###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산업 공급망, 에너지이다. 주요 논문으로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4), “The Effects of Risk-hedging Motives and Trade Costs on Foreign Bond Holding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25)가 있다

##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6.2.5.~2026.2.18.)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 미국-인도 무역 합의 발표(2.2.)

- ▶ (주요 내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일 SNS를 통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며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

\* 미국은 인도에 대해 25% 상호관세 및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추가 25% 관세 부과중

- 또한 인도는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등을 포함하여 5,000억 달러(약 723조원)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일부 농업 분야, 통신, 제약, 방산 시장 포함)
- 한편 모디 인도 총리는 SNS에서 관세 18% 인하를 확인하였으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에 대해서는 침묵
- ▶ (평가) 이번 관세 인하 배경에는 지정학적 요인과 통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배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도 존재
  - 미국은 러시아의 자금줄 차단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유도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수요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
  - 또한 인도가 최근 유럽연합과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이 인도를 EU에 뺏기지 않도록 협상을 서둘렀다는 분석
  -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관계 복원이라는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의 어려움 ▲5,000억 달러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의 과도함(‘24년 830억 달러 기록) ▲최종 협정문 이전까지의 불확실성 등을 경고

출처: Truth Social, X, Atlantic Council(2.2.), Reuters, NYT, CNBC, 파이낸셜타임스, 연합뉴스, CFR(2.3.) 등

### ■ 日-英 정상회담 개최(1.31.)

- ▶ (주요 내용) 다카이치 사나에 日 총리와 키어 스타머 英 총리,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침 확인
  - 양국은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사이버·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체 설치 ▲풍력, 양자, 에너지 분야 협력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가속화 및 연내 2+2 회의(외교+국방) 개최 ▲CPTPP 확대를 위한 결속 확인 등에 합의

- ▶ (평가) 주요 언론은 일본과 영국이 中 자원 수출규제, 美 우선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

- 일각에서는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는 中의 희토류 수출규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 제시

출처: 日 외무성 보도자료(1.30.), 이데일리(2.1.), 경향신문(2.1.) 등

## ■ 美 주도 ‘2026 핵심광물 장관회의’ 개최 및 FORGE 출범 발표(2.4.)

- ▶ (주요 내용) 미국 국무부, 최초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를 개최 / 56개국이 참여해 안전하고 탄력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치 논의(2.4.)

- 이번 회의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후속기구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로 재편되어 공식 출범 / 한국은 2024.7월부터 MSP 의장국을 수임했으며, MSP가 FORGE로 재편되면서 남은 임기(2026.6월)까지 의장국 수임 예정

\*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 美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11개국과 신규 양자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팍스실리카(Pax Silica)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

- ▶ (평가) 美 정부는 최근 美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 100억 달러를 포함한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비축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발표(2.3.)

- EU, 일본 등 국가와 별도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등(2.4.)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전례 없는 자원을 동원 중인 것으로 평가

출처: 미 국무부 보도자료, EU 집행위 보도자료,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CNBC, Euronews (2.3.~2.5.) 등

## ■ 美 백악관, 경제안보 기여 등 미국 국익 우선하는 무기 이전·판매 방침 발표(2.6)

- ▶ (주요 내용) 美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 무기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 서명

\* Executive Orders\_Establishing An American First Arms Transfer Strategy

- (목표) ▲무기이전을 외교전략 및 재산업화의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 ▲동맹·우방국의 구매 및 자본을 활용한 美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을 위한 무기이전 전략 수립

- (내용) ▲국가안보전략(NSS)에 핵심적인 무기 생산 기반 강화 ▲외국 구매·자본을 활용한 美 산업기반 강화 ▲핵심 품목 공급망 강화 및 병목 방지 ▲무기 이전·판매 우선 대상 기준\* 제시

\* ▲자국 스스로 방위 역량에 투자 ▲미국의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 ▲미국 경제안보에 기여

- ▶ (평가) 주요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을 동맹 방위 분담을 강조하고 서반구로의 역량 집중을 강조한 美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해석

- 특히, 무기이전 전략을 공급망 강화, 재산업화 등 경제안보와 연계한 점에 주목

출처: 美 백악관(2.6.), Reuters(2.6.), 연합뉴스(2.7.) 등

## ■ 美 반도체 장비회사 Applied Materials 對中 불법 수출 관련 美 BIS 제재 조치

- ▶ (주요 내용) 상무부(BIS), Applied Materials(AMAT) 및 자회사 AMAT Korea, Ltd.가 中 반도체 기업에 미국産 반도체 제조장비를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 관련 총 2억 5,200달러(3,600억원 규모)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고 발표
  - 이온주입기(Ion Implanter) 등 美 수출관리규정(EAR) 상 통제 품목을 중국 소재 기업에 이전하면서 사전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핵심
  - 관련 거래 규모는 약 1억 2,600만 달러로 벌금은 통상 적용 기준에 따라 위반 거래액의 최대 두 배 수준에서 산정
- ▶ (평가) 첨단 제조장비에 대한 대중 통제 강화 기조下, 대형 글로벌 장비기업 및 해외 자회사에 엄격한 라이선스 준수 의무 및 높은 제재 강도가 적용됨을 재확인한 사례

출처: 美 BIS Press Release, 한국경제 등

## ■ 일본,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

- ▶ (주요 내용) 일본의 1차 대미 투자로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오하이오) ▲석유·가스 수출 인프라 정비(텍사스) ▲산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건설(조지아)이 선정되었으며, 모두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 산업 공급망 자립, AI 전력수요 대응과 직결된 전략 분야
  - 투자 방식은 일본이 자본을 제공하고 미국이 부지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정책금융·무역보험을 결합한 국가주도형 모델
  - 2차 투자 후보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구리 정련, 배터리 소재가 거론되며 협력 범위가 전력·광물·첨단제조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 / 다카이치 총리 방미 계기(3.19일 예정) 발표될 가능성
- ▶ (평가) 이번 발표는 미국-일본 동맹의 결속을 대외 과시하면서,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린 정치적 성격도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
  - 공급망 공동 구축을 통한 전략적 결속 강화와 대중국 의존 축소가 핵심 목표로 평가되는 한편, 일본 현지 언론들은 조기 발표를 위해 협상을 서두르면서 수익 배분이 미국 측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우려

출처: Yomiuri, Nikkei, 조선일보, 한겨레, 이투데이, 한국경제(2.18.~19.) 등

## ■ EWS 공급망

| 국가    | 일자    | 내용  |
|-------|-------|---|
| 중국    | 1.20. | [수출입] 해관총서, 중국의 2025.12월 수출입 통계 발표  |
|       | 1.20. | [희토류] 2025년 전체 디스프로슘, 터븀, 이트륨 관련 품목 수출량 전년 대비 각 ▲35.5%, ▲37.5%, ▲39.6% 감소   |
|       | 1.21. | [기업결합] 시장총국, 불산시 남해구 5개 LPG 충전 사업자 간 신규 합작기업 설립 관련 기업결합 금지 결정   |
|       | 1.27. | [자동차]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2025년 중국 자동차 산업 국내 특허 데이터 통계 연구 보고서’ 및 ‘2025년 중국 자동차 산업 해외 특허 데이터 통계 연구 보고서’ 발표   |
|       | 1.29. | [회담] 中-英 정상회담 개최  |
|       | 1.29. | [기업결합] 시장총국, 2025년 기업결합 승인 현황 발표<br>: (심사 현황) 총 706건 심사 / ▲687건 무조건 승인 ▲13건 신청 후 자진 철회 ▲5건 조건부 승인 ▲1건 금지  |
|       | 1.30. | [산업]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4차 집체 학습 계기 6대 미래산업* 발전 강조<br>*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핵융합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피지컬 AI, 6G 이동통신  |
|       | 2.2.  | [항공] 10개 중앙정부 부처, 저궤도 경제* 표준체계 공동 구축<br>* 지상 1,000m 이내(특수지역 최고 3,000m) 공역에서 유·무인 비행체, AI-IoT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경제활동 및 ▲부가적으로 연결되는 저궤도 기초 시설, 저궤도 비행체 제조·운영 서비스, 안전 보장 등 총괄 |
|       | 2.4.  | [구리] 연구보고서 공유 플랫폼 ‘삼개피장보고’, 구리 정광 전략 비축 범위 및 관련 전망 보고서 발표<br>: 구리 정광 산업체인 안정성 강화 기대 및 구리 가격 및 제련 수수료 중기적으로 동반 상승 전망   |
|       | 2.4.  | [텅스텐] 장강 종합 텅스텐 분말 가격 급등<br>: 텅스텐 분말 평균 가격 톤당 1,545,000위안으로 전 거래일 대비 25,000위안 급등 / 최근 최고가 경신  |
|       | 2.6.  | [15.5계획] 리창 총리, 국무원 제10차 전체회의의 주재를 통해 정부업무보고 및 15차 5개년 계획 초안 논의   |
|       | 2.6.  | [투자] 리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의 주재 및 투자 촉진 정책·조치 등 연구<br>: 중앙·국유기업 역할 효과적 발휘 및 민간투자 발전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를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 발휘 필요  |
|       | 2.12. | [자동차] 시장총국, 《자동차 산업 가격 행위 준수 지침》 제정   |
|       | 2.12. | [AI] 국무원 국유자산위, 중앙기업의 ‘AI+’ 발전 과제 제시<br>: (핵심 과제) ▲자체 혁신 강화 ▲활용도 제고 ▲투자 견인 ▲오픈소스 협력   |
|       | 2.13. | [경제성장] 31개 성(省),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경제일보)<br>: 70% 이상 지역이 ‘5% 내외’ 이상 목표 제시  |
|       | 2.13. | [회담] 중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
|       | 미국    | 1.20.   |
| 1.23. |       | [AI] 구글, 日 사카나AI에 출자  |
| 1.27. |       | [AI] AI 과학연구계획 “제네시스 미션”에 日 협력 발표(日 문부과학성)  |

| 국가 | 일자    | 내용   |
|----|-------|--|
| 미국 | 1.28. | [경제] 美-대만 고위급경제회의(Economic Prosperity Partnership Dialogue) 개최<br>:팍스 실리카(Pax Silica) 선언 및 경제안보 협력 관련 공동성명 서명  |
|    | 1.28. | [USMCA] Greer 美 무역대표 - Ebrard 멕시코 경제장관, USMCA 개정 가능성 공식 협의 개시에 합의<br>: (개정 논의 대상) ▲주요 산업재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역외 무역정책 조율 강화 등                                    |
|    | 1.29. | [관세] Trump 대통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 제공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행정명령 발표  |
|    | 1.29. | [항공] Trump 대통령, 캐나다산 모든 항공기의 미국 내 인증 취소 및 캐나다 항공기 50% 관세 부과 경고(Truth Social)<br>:캐나다의 미국산 걸프스트림(Gulfstream) 항공기 인증 거부를 사유로 인증 취소 및 관세 부과 경고                                |
|    | 1.29. | [무역합의] 美-엘살바도르 상호무역협정 체결   |
|    | 1.30. | [연준] Trump 대통령, Kevin Warsh 연준의장 지명  |
|    | 1.30. | [무역합의] 美-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 체결  |
|    | 1.30. | [철강] 美 주요 철강업계 CEO, Trump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232조 철강 및 자동차 관세의 일관되고 확실한 집행 촉구(Inside US Trade)   |
|    | 1.30. | [제재] 행정부, 시위 관련 이란 정부 인사 제재  |
|    | 2.2.  | [무역합의] 美-인도 무역 합의 타결 발표<br>: (주요 내용) ▲상호관세 25%→18%로 인하 ▲인도의 대러 원유 수입 중단 약속* 등<br>* Modi 인도총리 발표에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내용 미포함   |
|    | 2.2.  | [핵심광물] Trump 대통령, 핵심광물 비축사업 'Project Vault' 발표<br>: 美 수출입은행(EXIM), Project Vault에 100억불 규모 직접 대출 승인  |
|    | 2.2.  | [제조업] Trump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공약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 20만 개 이상 감소 ▲상호관세 발표 이후 8개월 연속 제조업 고용 감소(WSJ)   |
|    | 2.3.  | [회담]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br>: ▲민간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지속 긴밀 협력 합의   |
|    | 2.3.  | [어업] 국립해양대기청(NOAA), 조업 중단 방지를 위한 어업 긴급 규정 발표   |
|    | 2.4.  | [핵심광물] USTR, 핵심광물 관련 對EU, 일본, 멕시코 협력방안 발표  |
|    | 2.5.  | [무역합의] 마-아르헨티나, ▲관세인하 및 철폐 ▲수출통제 공조 ▲제3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규정 ▲투자심사 ▲핵심광물 협력 등 무역합의 체결   |
|    | 2.5.  | [식량] 식품의약청(FDA), 식품 색소 관련 추가 조치 발표: 석유계 색소 무첨가 제품에 '인공색소 무첨가' 문구 사용 가능   |
|    | 2.6.  | [어업] 상원 외교위, '글로벌 어업 보호법' 법안 본회의 표결에 회부  |
|    | 2.6.  | [핵심광물] 국무부, Rubio 장관 주재 핵심광물 장관회의(2.4) 결과를 담은 Fact Sheet 발표  |
|    | 2.6.  | [관세] Trump 대통령,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추가관세 행정명령* 발표<br>* 이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국가의 경우, 미국 수출 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상무부·국무부·USTR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관련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 |

| 국가 | 일자    | 내용  |
|----|-------|---|
| 미국 | 2.6.  | [반덤핑]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정정 결과 발표   |
|    | 2.6.  | [무역협정] 백악관, 미-인도 잠정 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 공동성명 및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한 대인도 25% 추가관세 종료(2.7~) 행정명령 발표  |
|    | 2.6.  | [對이란 제재] 미-이란 고위급 협의 및 美 행정부 對이란 제재 부과 발표<br>: ▲이란산 석유 불법 거래 기관 15곳 및 개인 2명 ▲그림자 선단 선박 14척 제재   |
|    | 2.6.  | [식량] 행정부, 미국 내 쇠고기 가격 안전을 위해 ‘미국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쇠고기 확보’ 선포문 발표   |
|    | 2.9.  | [무역합의] 美 백악관 및 USTR, 미-방글라데시 간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상호관세, 투자 등 관련 무역합의 발표   |
|    | 2.11. | [USMCA] Greer USTR, USMCA 재검토 협상 협의 시 멕시코측은 실용적 태도를 보인 반면, 캐나다 협상은 더 까다로웠다고 언급(Fox Business)  |
|    | 2.11. | [무역합의] Switzer USTR 부대표, 한미 무역합의 이행 갈등 속 한국 방문 및 여한구 본부장 회담   |
|    | 2.11. | [재정] 의회예산처(CBO), 미국 장기 재정전망보고서 발표   |
|    | 2.11. | [USMCA] Trump 대통령, 올해 USMCA 재검토 협상 앞두고 탈퇴 고심(Bloomberg)   |
|    | 2.11. | [의회] 하원, IEEPA에 근거한 對캐나다 관세 종료 결의안(H.J.Res.72) 가결   |
|    | 2.11. | [반도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美 반도체 업체(Applied Materials)의 한국 자회사(AMK)에 2.5억불 벌금 부과 발표<br>: 2020년부터 상무부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중국 파운드리 업체(SMIC)에 2021-22년간 美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26억불 장비를 수출한 혐의 |
|    | 2.12. | [온실가스] 환경보호청(EPA), 온실가스 규제 전면 폐지 발표<br>: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지 및 차량 온실가스 배출 최종규칙 발표  |
|    | 2.12. | [무역합의] 美-대만 무역협정 서명<br>: (주요 내용)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0%→15%로 인하 ▲2029년까지 미국산 LNG 및 원유, 민간 항공기 및 엔진 등 구매 등   |
|    | 2.12. | [미일관계] 美-日,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 첫 프로젝트로 3건 선정에 근접(Bloomberg)<br>* ①소프트뱅크 주도 데이터센터 인프라 사업 ②멕시코만 심해 석유 터미널 건설 ③반도체용 합성 다이아몬드 사업   |
|    | 2.12. | [미중관계] 정부, Trump 대통령 4월 방중 앞두고 對中 핵심 기술 규제 보류(Reuters)  |
|    | 2.12. | [무역합의] 美-북마케도니아 무역협상 타결 발표<br>: 북마케도니아에 대해 15% 상호관세 유지  |
|    | 2.12. | [관세]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NATO 동맹국 대상 관세 부과 시 의회 승인 의무화 법안(「나토 동맹국 존중 법안(Respect NATO Allies Act)」) 발의  |
|    | 2.13. | [해양] 백악관, “해양행동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 발표<br>: (주요 내용) ▲조선역량 재건 ▲인력 교육·훈련 개혁 ▲해양산업 기반 보호 ▲국가안보 및 산업 회복력 강화   |
|    | 2.13. | [관세] Trump 행정부, 11월 중간선거 전 물가를 고려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조정 검토(Financial Times)   |
|    | 2.13. | [무역합의] USTR, 美-에콰도르 상호무역협정 수주 내 서명 예정   |

| 국가 | 일자    | 내용   |
|----|-------|--|
| 미국 | 2.17. | [미일관계] 美 Trump 대통령, 일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트루스소셜)<br>* ①텍사스 석유·가스 ②오하이오 가스발전 ③조지아 핵심광물 / 총 규모 360억불                           |
| 일본 | 1.22. | [반도체] 日 자동차 업계, 반도체 조달정보 공유체계 구축 계획(닛케이)   |
|    | 1.23. | [경제안보] 경산성, “경제안보 경영 가이드라인” 발표   |
|    | 1.23. | [산업] 日 경산성, 차세대 프론티어 6개 영역* 육성 지원 전망(닛케이)<br>* ▲해양 로보틱스 ▲해양 CDR(Carbon Dioxide Removal) ▲천연 수소 ▲양자 센싱 ▲프론티어 소재 ▲브레인 뉴로테크 |
|    | 1.26. | [갈륨] 최근 3주간 갈륨 가격 20% 가까이 상승(닛케이)<br>: 유럽·미국 시장 기준 가격 1.22. 기준 1,600달러/kg로 연초 대비 16% 상승                                  |
|    | 1.26. | [희토류] 디스프로슘 가격 연초 대비 26% 상승 및 터븀 19% 상승(닛케이)   |
|    | 1.29. | [일미관계] 대미 투융자 제1호 프로젝트,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송배전 설비 등 후보(닛케이·지지통신)  |
|    | 2.2.  | [희토류] 미나미토리시마 해역 내 희토류 진흙 시험채굴 성공(닛케이)   |
|    | 2.3.  | [반도체] 日 소프트뱅크 - 美 인텔 간 차세대 메모리 협력 발표   |
|    | 2.4.  | [핵심광물] 美·EU·日 간 핵심광물 관련 공동언론성명 발표  |
|    | 2.5.  | [반도체] TSMC의 日 최초 3nm 반도체 양산 계획에 日 정부 지원 예정<br>: 설비투자 규모 170억 달러로 日 정부 지원 방침  |
|    | 2.5.  | [반도체] 라피더스에 민간 30개 기업이 1,600억엔 투자 예상(닛케이)  |
|    | 2.5.  | [반도체] 니토방적, AI 반도체용 차세대 유리 소재 '28년 상용화 계획(닛케이)   |
|    | 2.5.  | [자동차] 도요타,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28년까지 30% 증산(닛케이)   |
|    | 2.6.  | [대미투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원유 적출용 심해항, 인공다이아몬드 생산공장 3개 사업이 총액 6~7조엔 규모로 추진될 전망(닛케이)                               |
|    | 2.6.  | [태양전지] 경산성, 탠덤 태양전지 연구개발 지원(닛케이)<br>: 화학기업 가네카 및 Choshu Industry에 약 95억엔 지원  |
|    | 2.8.  | [우주] 알루미늄 업체 UACJ, H3로켓 부품의 신속 공급 위해 국내 공장 설비 구축 예정(닛케이)   |
|    | 2.9.  | [자동차] 도요타, 중국서 로보택시 양산 개시 발표<br>: 中 자율주행기업 포니시와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용 EV 양산 개시  |
|    | 2.10. | [경제안보] 내각부 경제안보 전문가회의, 경제안보추진법 개정 관련 제언서 제출  |
|    | 2.10. | [AI] 정부, 법무·의료 분야 AI 규제 완화 검토 중(닛케이)   |
|    | 2.10. | [가상자산] 금융청,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방침(안) 발표   |
|    | 2.10. | [철강] 도요타, 일본제철 등 철강 3사로부터 저탄소 녹색철강 조달 개시(닛케이)  |
|    | 2.11. | [AI] 후지쯔, AI 서버 국내 일괄생산 개시 계획(닛케이)   |
|    | 2.11. | [데이터센터] 요코하마항에 데이터거점 증가(닛케이)<br>: 일본우선 및 JERA, 요코하마항 해안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추진 중   |
|    | 2.13. | [미일관계] 아카자와 경산대신, 미 상무장관과 대미 투자 관련 회담  |
|    | 2.13. | [핵심광물] 아카자와 경산대신, 핵심광물 관련 통상장관 회의 참석   |

| 국가    | 일자  | 내용   |
|-------|---|--|
| 일본    | 2.13.   | [희토류] 미쓰이금속, 규슈에 희토류 연구소 신설 계획 발표  |
|       | 2.16.   | [자동차] 국토교통성, 미국산 승용차 인증 제도 공포<br>: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절차 간소화   |
|       | 2.17.   | [희토류] 종합상사 소지쯔, 호주산 중희토류 수입 확대(닛케이)  |
|       | 2.17.   | [조선] 제1회 '일미 조선 실무그룹' 개최 예정(워싱턴DC)   |
|       | 2.18.   | [미일관계] 다카이치 총리, 일미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제1호 안건 합의 발표(X)  |
| EU    | 1.27.   | [무역합의]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美-EU 무역합의 승인 관련 결정 유보   |
|       | 1.27.   | [철강] 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EU 철강쿼터법안 수정안 채택  |
|       | 1.29.   | [미-EU 관계] 의회 국제통상위원장, 미-EU 무역협정 표결 가능하며 미국이 EU 영토 보전 등 핵심안보 위협 시 EU의 관세 인하를 중단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다고 발표                         |
|       | 1.30.   | [경제] 집행위, 2026 연례 단일시장 및 경쟁력 보고서 발표  |
|       | 2.1.  | [디지털] EU-싱가포르 디지털 통상 협정 발효   |
|       | 2.3.  | [철강] 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EU 철강쿼터법안 수정안 공개  |
|       | 2.10.   | [기업결합] 집행위, 구글(Google)의 위즈*(Wiz) 인수 승인<br>* 미국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업체   |
| 2.13. | [반덤핑] EU 집행위, 한국산 ABS 수지 반덤핑 조사 관련 확정관세 관보 게재 : 5.2%~7.5% 최종 확정관세 부과  |  |
| 2.24. | [무역협정] 유럽의회, 미-EU 무역협정 승인을 위한 표결 진행 합의<br>: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15%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부과 하는 내용의 일몰조항 포함키로 합의 |  |
| 대만    | 2.6.  | [반도체] TSMC, 日 다카이치 총리에 최초 3nm 반도체 양산 계획 설명   |
|       | 2.12.   | [무역합의]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ART)」 공식 서명(워싱턴 D.C.)<br>: (주요 내용) 상호관세 15% 및 제232조 관세 MFN 대우 확보 등                                    |
|       | 2.10.   | [반덤핑] 경제부, 韓·中 전자강판 반덤핑 관련 '산업 피해' 예비 인정   |
| 캐나다   | 2.5.  | [자동차] 카니 총리, '캐나다 신 자동차 전략' 발표<br>: (주요내용) 대미 의존형 내연기관 제조업 → EV·배터리·AI 중심 첨단 미래 산업으로 재편 및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
|       | 2.6.  |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스텔란티스 합작 EV배터리 공장 단독 소유권 확보  |
| 호주    | 2.3.  | [전기차] 정부, 현대·기아 전기차 한정 구매 지원 프로그램 발표<br>: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현대차 차량-그리드 기술 지원을 위해 6천만 호불을 투입해 현대·기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
| 영국    | 2.13.   | [세이프가드] 철강 세이프가드 재심(1.14일 개시) 관련 최종 판정(안) 발표   |
| 독일    | 1.28.   | [경제] 연방경제에너지부, 2026년 연례 경제보고서 발표<br>: (주요 내용) 2026년 독일 경제성장률 1.0%로 하향 조정 등   |
|       | 1.29.   | [조선] TKMS - 캐 조선 기업 Seaspan 간 협력 협정 서명(TKMS)   |
|       | 2.7.  | [핵심광물] 외교장관,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중요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추진   |
|       | 2.7.  | [광섬유] 정부, 철도를 따라 3만 3천 km 보안 광섬유망 구축 예정(Handelsblatt)  |

| 국가      | 일자    | 내용  |
|---------|-------|---|
| 독일      | 2.7.  | [AI]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해 올해 신규 투자 규모 5억 유로 증액된 27억 유로로 확대  |
|         | 2.7.  | [방산] 연방군, 드론·AI 혁신센터 개소(Handelsblatt)   |
|         | 2.14. | [AI] 독일-캐나다 인공지능 분야 협력 심화(디지털·국가현대화부)   |
| 스위스     | 1.28. | [반도체] 연방각의, '스위스 반도체 전략' 보고서 채택(경제부)  |
|         | 2.6.  | [핵심광물] 스위스 광물기업 글렌코어, 미 컨소시엄 Orion CMC*와 민주콩고 광산 지분 매각 MOU 체결<br>*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지원하는 Orion Resource Partners가 설립한 컨소시엄 |
| 프랑스     | 1.29. | [사이버안보] 2026-2030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발표   |
| 네덜란드    | 2.11  | [반도체] 네덜란드 법원, Nexperia에 경영 부실 문제 조사 명령   |
| 핀란드     | 2.11. | [조선] 미국 해안경비대와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 간 쇄빙선 건조 계약(2척) 체결 발표  |
| 브라질     | 2.5.  | [관세] 브라질 정부, 전자통신부품 수입관세 인상 관보 게재·시행 : 정보기술·통신부품 및 자본재 분야 1,264개 품목 상향 조정   |
| 칠레      | 1.27. | [핵심광물] 정부, 핵심광물 국가 전략(EMC) 발표   |
|         | 2.9.  | [리튬] 국영동공사(Codelco) 등 주요 리튬 기업, 환경부의 아타카마 염호 내 보호구역 지정 계획 반대(La Tercera)  |
| 말레이시아   | 1.29. | [투자] 투자통상산업부, 신규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발표   |
|         | 2.4.  | [전자폐기물] 정부, 전자폐기물(e-waste) 수입 전면 금지 및 관세 규정상 '절대적 금지' 품목으로 분류   |
| 베트남     | 1.1.  | [수입규제] 베트남 과학기술부, 반도체 및 디지털 제품 생산 장비 관련 수입 규제 완화(시행규칙 30/2025/TT-BKHCHN) 시행   |
|         | 1.27. | [배터리] 김롱모터社, 中 BYD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 계획 발표  |
| 인도      | 1.28. | [안보] 인도-사우디 안보 협의회 개최   |
|         | 2.1.  | [예산] 재무부, 2026-27년 예산안 발표(2.1)  |
|         | 2.10. | [항공] 방산·항공우주 기업 아포지 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수상항공기 전문 기업 AAI와 수상·육상 항공기 15대 구매 계약 체결(Economic Times)                                     |
|         | 2.10. | [FTA] 인도, GCC*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범위·방식(ToR) 합의<br>*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
|         | 2.12. | [리튬] 안보 이유로 러시아 연계 말리 리튬 프로젝트 철수(Financial Times)<br>: 무장단체 공격 증가와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사업 일시 중단                        |
| 인도네시아   | 1.28. | [무역합의] 정부, 미국산 드론 구매 거부(The Strait Time)<br>: 미국이 요구한 드론 구매는 거부했지만, 무역 협상의 다른 조건에는 동의                                       |
| 태국      | 1.28. | [자동차] 태국산업연맹(FTI), 2026년 태국의 자동차 생산·판매 전망 발표  |
| 콩고민주공화국 | 2.3.  | [경제협정] 치세케디 대통령, UAE 방문 : 민주콩고-UAE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바나나 심해항 건설 MOU 및 외교 협력 MOU 체결  |
|         | 2.5.  | [인프라] 민주콩고-앙골라-잠비아, 로비토 회랑 삼자회의 개최  |
|         | 2.9.  | [광업] 광업부, 광산기업 지분 5% 콩고 국적 직원에 양도 조치 명령   |

## ■ 에너지

| 국가      | 일자    | 내용   |
|---------|-------|--|
| 중국      | 1.28. | [자동차]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전국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매출 연평균 49.5% 증가 (국가세무총국)   |
|         | 1.29. | [발전] 국가능원국, 2025년 국가 발전 용량 통계 발표<br>: ▲(발전 설비용량) 전년 대비 543GW 증가하여 누적 총 3,891GW 달성(16.1% 증가)<br>▲(전력 생산량) 2025년 최초로 10조 kWh 돌파(전년 대비 5% 증가) |
| 미국      | 2.11. | [석탄] Trump 대통령, “한국·일본·인도 등과 미국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무역 합의 체결” 언급  |
| 일본      | 1.22. | [원자력] 2026년 日 원자력 비중 10% 돌파 전망(닛케이)  |
|         | 1.23. | [태양광] 환경성·경산성,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안) 발표 :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자에게 패널 폐기계획 사전 제출 요구 및 재활용 추진 의무화  |
|         | 2.4.  | [LNG] JERA, 카타르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와 '28년부터 LNG 300만톤/연 수입 계약 체결(닛케이)  |
|         | 2.14. | [태양광] 경산성,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성능평가 거점 마련 예정(요미우리)  |
|         | 2.17. | [석유·가스] 경산성, 2024년도 석유·천연가스 자주개발 비율(42.1%) 발표 : 전년도 대비 4.9%p 증가 / 사상 최고 수준   |
| 호주      | 1.23. | [태양광]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태양광 공유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공개  |
| 네덜란드    | 2.3.  | [에너지] 정부, 독일 정부에 북해 에너지기업 테넷 독일 지분 매각  |
| 독일      | 2.7.  | [그린에너지] 독-사우디 그린에너지 협력 확대 : 사우디 풍력·태양광으로 생산된 수소를 독일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서명  |
| 칠레      | 1.29. | [풍력] Faro del Sur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승인 획득   |
| 베트남     | 1.26. | [원자력] 총리,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관련 회의 주재   |
|         | 2.9.  | [LNG] 국영 전력공사 EVN, PowerChina·LILAMA와 9억 7,400만 달러 규모 LNG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   |
|         | 2.12. | [원자력] 베트남 총리, 제5차 원자력 발전소 지도위원회 주재   |
| 인도      | 2.6.  | [원유] '25.12월 인도 대러 원유 수입액 약 27억 달러 규모로 '25.2월 이후 월간 기준 최저치 기록(The Times of India)  |
| 콩고민주공화국 | 2.2.  | [수력] 민주콩고-프랑스, 잉가 3 수력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 발간호<br>(발간일)         | 구분                              | 제목  | 저자명 |
|----------------------|---------------------------------|---|-----|
| 26-1호<br>(2026.1.9)  | 분석                              |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 이재원 |
|                      | 분석                              |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 임산호 |
|                      | 현안                              |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 최용호 |
| 26-2호<br>(2026.1.23) | 분석                              |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 유아름 |
|                      | 현안                              |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 안수린 |
|                      |                                 |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     |
| 현안                   |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 김단비   |     |
| 26-3호<br>(2026.2.6)  | 분석                              |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 이재원 |
|                      | 현안                              |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 황지현 |
|                      | 현안                              |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 안수린 |
| 26-4호<br>(2026.2.27) |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br>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 최용호 |
|                      | 현안                              |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김수연 |
|                      | 현안                              |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역지력 강화 동향                                       | 임산호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